

외교안보부처 갈등 표면화하나

국정원장 사퇴, 대북정책 충돌 때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일부 감지돼 오던 정부 부처 간 갈등이 김승규 국정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불거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심지어는 김 원장의 사퇴가 통일부를 포함한 참여정부 내 대북 포용론자 등과의 이견 때문이라는 관측마저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부는 물론 국정원도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동안 양 기관이 대북 정책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온 터라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다.

北미사일·핵실험 사사건건 이견 노출 통일부, 국정원 반대 민노당 방북 승인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31일 방북을 놓고 통일부가 국정원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승인하는 등 '간접잡는' 국정원과 '북한을 끌어안으려는' 통일부의 조직의 성격상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이견이 내부에서 원만하게 조율되지 못하고 외부로 터져나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참여정부의 레임덕 현상으로 분석하는 견해도 있다.

30일 정부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7월 5일 이후 대북 스탠스를 놓고 부처 간에 충돌하는 모양새가 부쩍 늘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 제19차 남북 장관급회담의 개최 여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7일 후인 11일부터 부산에서 열린 예정이던 장관급회담을 계획대로 여느냐 여부를 놓고 당시 정부 내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문을 스스로 닫지는 말아야 한다'는 통일부와 '미사일을 쏜 북한과 무슨 대화냐는 다른 외교안보부처 간에 심각하게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7일 노무현 대통령을 '독대'한 뒤 개최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이견은 봉합됐지만 반대파 중 일부는 여전히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이때까지만 해도 잠복해 있던 부처 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북한이 끝내 10월 9일 핵실험까지 감행한 이후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없이 계속하기로 결정했고 대북 포용정책도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임을 천명했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하기까지는

통일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3일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북 포용정책을 매도, 매장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의 시각은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지난 13일 여야 정보위원에게 배포한 보고서를 통해 "남북관계 및 6자회담에 대한 신중하고도 근본적인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경협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86세대 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북한 공작원 접촉사건'을 한창 수사중이던 국정원으로서 북한 핵실험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정부 일각 및 시민 사회단체들의 안보 불감증에 상당한 안타까움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과 통일부 뿐만이 아니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중국 탕자위안(唐家璇) 국무위원이 전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다소 엇갈린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국정원 내부에서도 알력이 있었다는 관측도 흘러나왔다. 현 정부 들어 힘을 받고 있는 국정원 내 일부 간부가 김승규 원장을 흔들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이다.

그러던 차에 김 원장의 사퇴 배경에 통일부, 청와대 등 대북 포용론자와의 갈등이 있고 포용정책이 지속되는데 대해 김 원장이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갈등설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연말뉴스



평양을 방문하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대표, 문성현 대표, 노회찬 의원 등 지도부가 30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일 면담 가능성 있다”

‘간첩단 사건’속 민노당 지도부 방북 출국

‘386 간첩단 사건’으로 방북여부가 불투명했던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방북이 결국 이뤄졌다. 민노당 지도부는 30일 오후 평양 방문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출국했다.

북한 조선사회민주당의 초청으로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닷새간 진행되는 이번 방북은 북한 핵실험 이후 전세계 모든 단체와 정당을 통틀어 처음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노당은 이번 방문 기간 핵실험에 대한 납득의 우려와 핵 포기 요구 등을 북한 당국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민노당은 추가 핵실험 반대 요구 및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논의 등을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의 면담을 신청한 상태이다. 한 핵실험당직자는 “김영남 위원장과의 면담은 거의 확실시되고,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와 권영길 의원단대표, 노회찬 의원, 김은진, 홍승하 최고위원, 박용진 대변인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된 방북단은 31일 오후 북한 고려민항 항공기편으로 평양에 도착한다.

연말뉴스

관망 끝...대선행보 본격화

고건 前총리 신당 참여로 지지율 급락 정면돌파

물다리도 두드리려고 건너지 않았던 고건 전 총리가 신당 참여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 전 총리가 신당 참여를 선언한다면 정계개편 구도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것은 물론 정계 개편 흐름에도 가속도가 붙기 때문이다.

일단 고 전 총리는 다음달 2일 청주에서 열리는 '미래와 경제' 세미나 이후 열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신당 참여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 전 총리의 복심으로 알려진 김덕봉 전 총리 공보수석은 30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고 전 총리는 기존 정당과는 거리를 뒀지만 중도실용세력의 대통합을 이루는 신당에는 뜻을 뒤렸다”며 “다음달 2일 미래와 경제 세미나 이후 기자회견에서 신당 참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 등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고건 전 총리가 신당 참여에 나서는 것은 여론 발 정계개편 과정을 지켜보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세를 규합할 수 있는 신당 참여를 통해 최근의 지지율 급락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고 전 총리는 그동안 열린우리당, 민주당의 원들과 활발한 물밑접촉 결과 정계개편 과정에서 자신의 영입을 기다리기 보다는 신당 창



당과정 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당 창당은 연말께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 북한의 핵 실험 위기가 어느 정도 가다가 잡히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고건 전 총리의 신당 참여 선언에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고건 전 총리가 북한 핵 실험 사태가 가다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내달 2일 신당 참여 선언을 할 것인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여기에 여론의 정계개편 논의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데다 민주당도 고건 전 총리와 거리 두기에 나서고 있어 신당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고건 전 총리가 신당 참여 선언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고 전 총리도 더 이상 정치적 행보를 늦추기에는 부담이 많다는 점에서 우선 신당에 참여한다는 뜻을 피력할 가능성은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선승리구도 깬 分黨 반성해야 신당 창당 아픔이지만 국민 위해”

정대철 우리당 상임고문

열린우리당 정대철 상임고문은 30일 “정부여당이 모두 국정 실패를 자인하고 지난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선거구도를 해체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동태입니다'에 출연해 “우리당의 창당 목표였던 지역구도 탈피도 하지 못했고 우리가 좀 모자란 영남에서도 전혀 표가 오지 않아 결과적으로 평도 매도 놓친 격이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지역감정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더 무리한 것을 없다고 외면해서 비현실적인 결과를 갖고 왔다”며 “민주당 분당을 강행해 호남표를 민주당에 넘겨줬고, 충청도 표는 수도권 이전의 의미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한나라당에 넘겨줬으며, 독선적으로 비치는 국정운영 때문에 중립적 계층의 지지도 아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정 고문은 신당 창당을 위한 당내 특별기구를 설치하지는 않겠는 전정배 전 법무장관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집권 여당으로서 생존해 있는데 신당을 만드는 것은 아픔이지만 국민이 원하는 집권 여당의 참다운 모습은 신당을 만들어 대통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초까지는 세 세력의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당 참여 범위는 “민주당 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고건씨 세력도 있지만 현재 정치는 경영능력을 증시하기 때문에 CEO 그룹을 흡수해 정당과 국가운영을 책임 있게 끌어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을 신당에 참여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 임기 후 일어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 대통령은 토론의 기본제가 되지 않는다”며 기존의 ‘노 대통령 배제론’을 재확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